

2023년 8월 25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귀하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용: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 법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께

우리는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정부 법안을 호소합니다. 귀하는 2021년 6월 24일 북한의 불법 남침 71주년을 맞아 28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6·25 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만 동 법안은 동년 8월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¹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최초로 국군포로 세 분이 초대받으신 후에도 초대받으셨던 3인 중 한 분인 이규일 어르신을 비롯한 국군포로 3명이 돌아가셔서 이제 국내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12명만이 살아계십니다. 이미 70년이 늦었지만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중대인권침해 조사기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월 18일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² 그러나 슬픈 현실은 한미일 3국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힘쓰려 해도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커녕 기본적 수치 업데이트조차 없습니다. 2007년 8월 마지막으로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탈북자와 탈북 국군포로, 국내 연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이라 하였습니다.³ 이후 수 천명의 탈북민과 탈북 국군포로들이 더 입국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업데이트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후인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내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수를 560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16년간 이 공식 수치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가족의 경우에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 가족 지원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관료적 이유로 개인의 수가 아닌 가구수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국방백서에서 161명, 2014년 국방백서에서 430“여”명의 국군포로 가족이 입국했다고 한 것이 한국 정부가 확인한 마지막 수치입니다.

2010년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는 국내 전시 민간인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구술 조사와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규명과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등 법적 책임규명을 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영문 종합보고서와 납북자 통합 명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¹ 대한민국 국회, 6·25 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의원 등 29인), 의안 제 2111051 호, 2021. 6. 24.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M1Z0V6A1G6R0M9E1M1C2O7Q1B1L2

²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2023. 8. 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yeE9qWIT>

³ 통일연구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2007), p. 8,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050>

베트남전과 1970년 해군 방송선 I-2 호정 나포사건 등에서 발생한 국군포로들까지 확인하여 적어도 전시 민간인 납북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실규명과 법적 책임규명, 국영문 종합보고서와 통합 명부 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고한 예산, 행정, 정치적 지원 공약을 확인받은 정부 법안을 반대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같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 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8월 25일 기준)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1969년 KAL 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탈북자동지회(NK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